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 ~ 2024)

금융위원회

2020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0.6.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7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목 차

| | |
|--------------------------------|----|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
| 1. 그간의 정책성과 | 1 |
|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8 |
|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0 |
| 1.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 10 |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14 |
| III. 세부 추진계획 | 16 |
| 전략목표 I | 16 |
| 전략목표 II | 25 |
| 전략목표 III | 33 |
| 전략목표 IV | 39 |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금융안정 유지 및 잠재 위험요인 관리

◆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시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 유도

① 증가속도 관리, 소금융권 DSR 도입 등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년말)11.6 ('17년말)8.1 ('18년말)5.9 ('19.3Q)3.9

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사업자대출, 고가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규제 강화('19.10월, 12월)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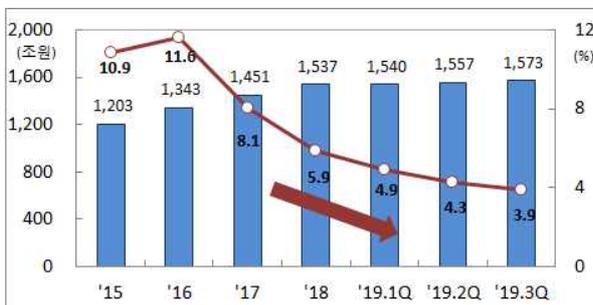
○ 부실채권(NPL) 시장의 민간중심으로 전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1.6조원) 등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③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

○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추진

* RP시장, 채권대차,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 마련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 시장형성 선도 | 회생기업 지원 |
|---------------------------------|----------------------------------|
|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최대 5조원) | ③ DIP 금융 활성화 (직간접지원 연 2,300억원) |
| ② 유암코(2천억원) 및 캠코 (年 2천억원) 투자 확대 | ④ S&LB 등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연 2,000억원) |

나.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

◆ 기업 여신심사 추진, 모험자본 확대, 정책금융 공급 추진 결과, 기술력·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 공급

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 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新 예대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이 747조원을 상회
- ②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 동산금융 공동 DB 구축('19.8월) 등 담보관행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동산담보대출 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②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혁신을 추진

- ① 성장지원펀드를 조성(3년간 8조원)하고 대형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등 대상 모험자본 공급 확대('13말 0.07조원→'19.3말 1조원)
- ②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에 '혁신성'을 강화^① 하고, 상장절차도 간소화^②

① 주력 기술 및 사업의 독창성·확장성, 사업화·R&D 역량 등을 심사지표로 활용

② 외부 기술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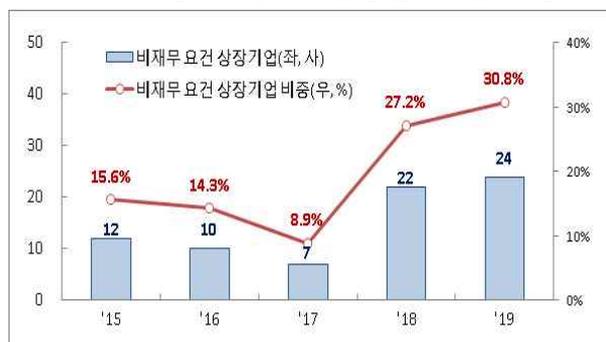
③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19.11월 기준 5.2조원) 등을 지원

<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 >



< 코스닥시장 비재무요건상장 기업 비중 >



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 금융권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新산업의 활성화 유도

1]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추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유도

- ① 혁신 ICT기업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18.10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예비인가, 1개사)
- ② 6년 만에 보험사를 신규허가(1개사, 온라인특화)하였으며, 10년간 신규 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도 신규인가(3개사)

2] 핀테크 산업발전·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구축

- ① 혁신적인 新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19.4월)
- ②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방식을 도입하는 P2P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19.10월)
- ③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안, '20.1월 국회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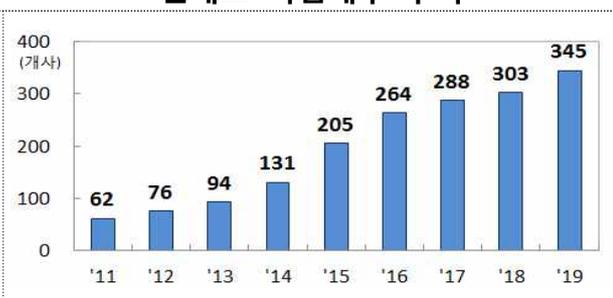
3]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19.4월~)하면서 현재까지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
- ② 오픈뱅킹 출범('19.12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19.6월~) 등을 통해 금융분야 新산업 활성화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 >



< 핀테크 기업체수 추이 >



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취약 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포용금융을 확대

1] 이자·수수료 등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①(27.9%→2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②을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①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1.1조원 경감 추정

② 약 27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연간 2천억원, 1인당 75만원)

② 우대가맹점 확대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1.4조원 추정) 완화*

*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 : (17.1월) 77 → (17.7월) 84 → (19.1월) 96

2]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강화

①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햇살론¹⁷ 신규 공급, 중금리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지속 경감

* 서민금융 공급액 ('08년 이후 누계) : ('15)22.2조원 → ('19년)49.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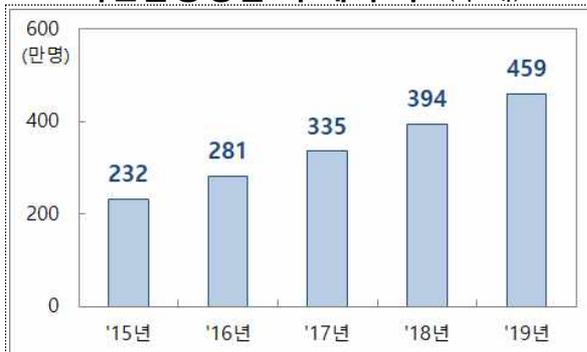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채무조정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

* '17.7월 ~ '19.12월까지 총 40조원(394만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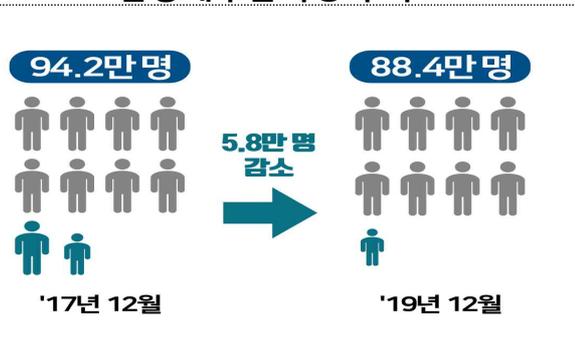
3] 금융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고령층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 등

<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수 (누계) >



<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



◇ '20년 금융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일반 국민(510명) 및 전문가(21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갤럽, '20.1월)

1.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 (인지도) 정부의 혁신금융 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전문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혁신금융과제 10개 중 4개 이상 인지 : 일반인 30.4% < 전문가 92.9%

< 설문 대상 혁신금융과제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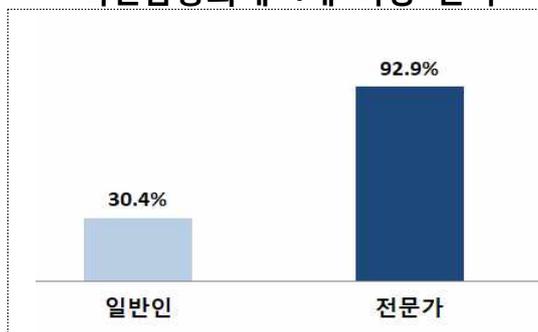
- | | |
|------------------|----------------|
| ■ 동산금융·일괄담보제도 |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
| ■ 신예대출 등 자본규제 개편 | ■ 성장지원펀드 |
| ■ 기술금융 | ■ 코스닥시장 상장활성화 |
| ■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 | ■ 오픈뱅킹 |
| ■ 빅데이터 | ■ 인터넷전문은행 |

□ (혁신금융 노력 및 변화) 일반 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노력 및 금융회사의 변화에 대해 낮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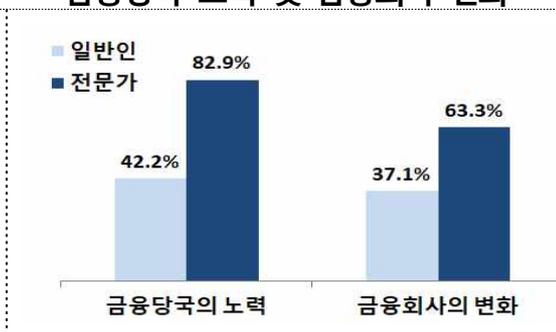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매우) 노력중 : 일반인 42.2% < 전문가 82.9%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에 따라 (매우) 변화중 : 일반인 37.1% < 전문가 63.3%

○ 일반 국민, 전문가 모두 당국의 제도·인프라 개선 노력에 비해 일선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인식

< 혁신금융과제 4개 이상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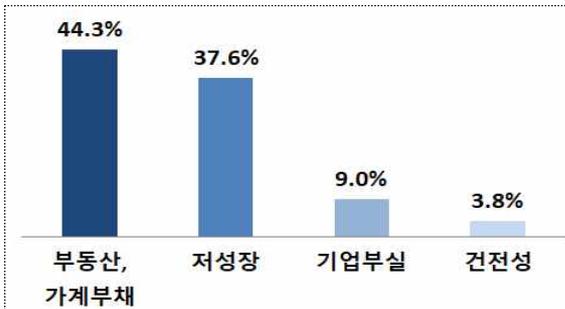
< 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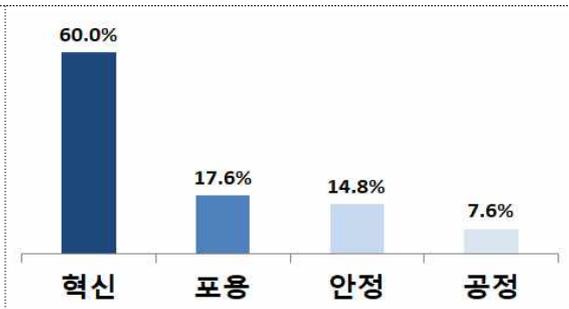
2. 2020년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 (추진여건) '20년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쏠림·가계부채(44.3%), 저성장(37.6%) 등을 지적
- (중점목표) '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금융(60.0%), 포용금융(17.6%), 금융안정(14.8%), 공정성(7.6%) 순으로 응답

< '20년 국내 금융시장 위험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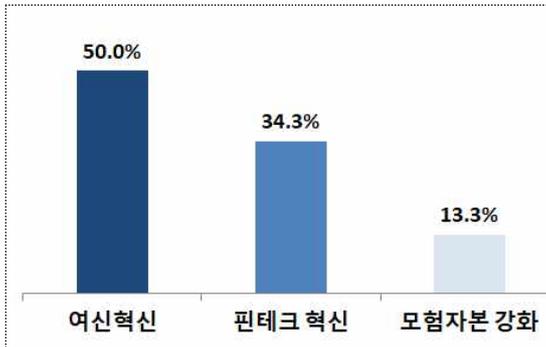


< '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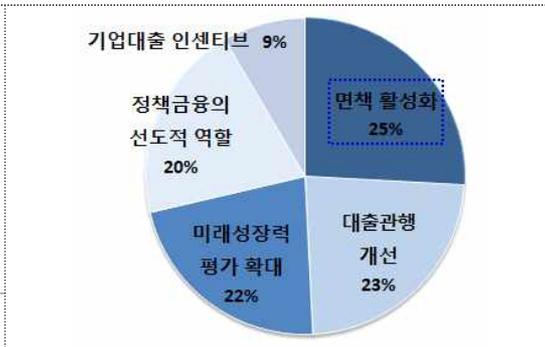


- (목표별 핵심과제) 중점목표별로 기업 여신혁신(혁신), 서민 지원(포용), 가계부채 관리(안정)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
- (혁신금융) 핵심과제로 기업 여신혁신(50.0%) → 핀테크 혁신(34.3%) → 모험자본 활성화(13.3%) 순으로 제시
- '기업 여신혁신' 과제에서는 금융회사 면책 활성화(25%), 대출관행 개선(23%)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지적

< 혁신금융 핵심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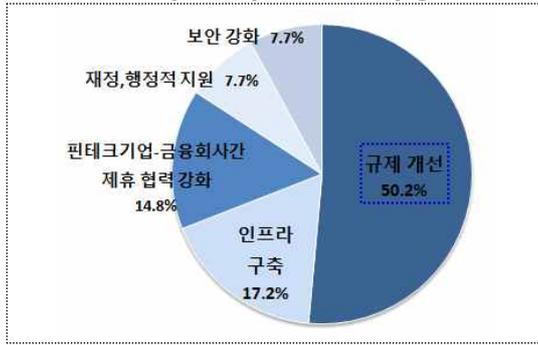


< 기업 여신혁신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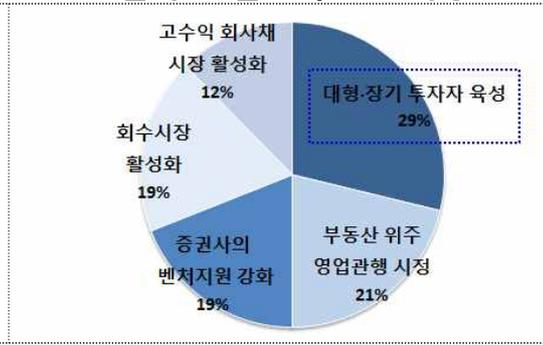


- '핀테크 혁신'에서는 규제 개선(51%), '모험자본 활성화'는 대형·장기투자자 육성(29%)을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

< 핀테크 혁신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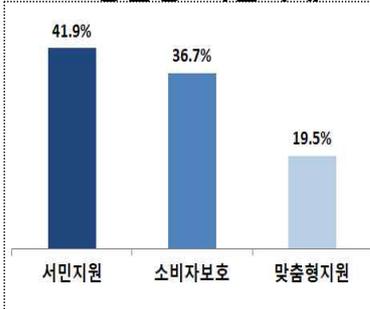


< 모험자본 활성화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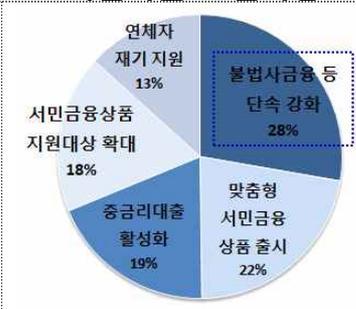


- **(포용금융)** 핵심과제로 서민 지원·취약계층 보호(41.9%) → 금융소비자 보호(36.7%) → 계층별 맞춤형 지원(19.5%) 제시
- '서민 지원'은 불법사금융 등 단속 강화(28%),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품설명서 개선(25%)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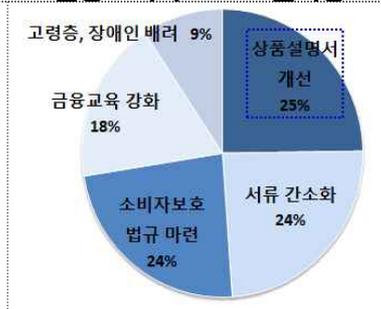
< 포용금융 핵심과제 >



< 서민지원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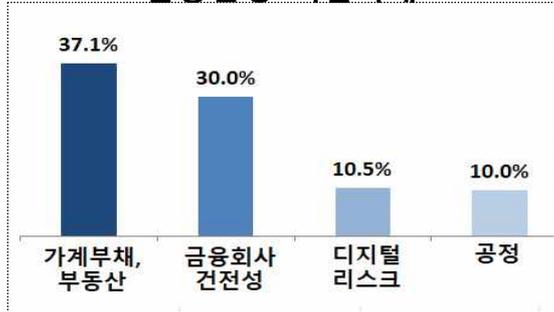


< 금융소비자보호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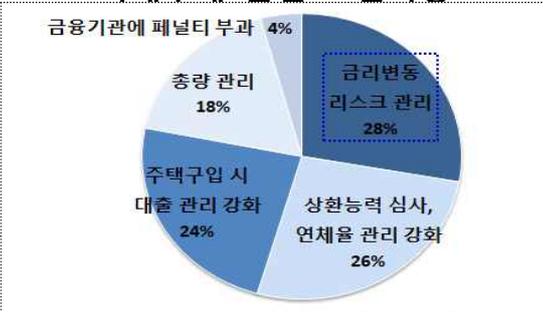


- **(금융안정)** 핵심과제로 가계부채 관리(37.1%)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30.0%) → 디지털 리스크 관리(10.5%)를 제시
- '가계부채·부동산 금융 관리'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28%)를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 금융안정 핵심과제 >



< 가계부채 관련 보완사항 >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혁신금융]** 그간의 혁신금융 추진 결과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중개 전반에 걸쳐 혁신금융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

-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위주 영업, 담보·보증 의존 관행이 여전하며 기업심사역량 제고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
 -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보증이 충분한 기업에 치중하는 사례가 여전히 곳곳에 잔존
- 일부 모험자본은 장기 투자, 벤처·혁신 투자 등 본연의 역할 보다는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 등 고수의 추구에 집중

▶ (벤처기업) "미래사업성 평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수적인 여신심사 관행이 지속"

➔ 미래성장성 중심의 기업여신체계 확립, 모험자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혁신금융 강화

◆ **[금융부문 혁신]** 진입규제 완화, 혁신서비스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산업 전반으로 변화를 확산시킬 필요

- 그동안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하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는 평가
- ➔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혜택 확대,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진입규제 개선, 경쟁·혁신 유도 필요
- 핀테크 법제 마련,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주도형 금융제도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
- ➔ 핀테크 경쟁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지원방안 마련 등 추진

◆ **[포용금융]** 서민금융 지원성과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의 진전이 있으나, 금융 포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

-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 채무조정 관련 금융제도·관행이 채무자의 재기지원보다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한 상품이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

▶ (고령층 이용자) "금융상품 이용이 전반적으로 온라인화·자동화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익숙치 않은 경우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음"

➔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제도, 관행, 자원조달, 교육 전반에 걸쳐 포용성 지속 강화

◆ **[시장안정]** 대내외 불안요인이 실물·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요인으로 실물·금융부문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상존
 - 가계부채, 기업부문 리스크 등 알려진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 펀드 유동성리스크, 부동산PF 익스포져 쏠림,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등 신규 위험요인도 부상
- ➔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한 실물·금융부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한 관리 등 대응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및 기구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구성(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부서별 주요기능 >

| 구 분 | 주요 기능 |
|-----------|--|
| 기획조정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
| 행정인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 금융정책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
| 구조개선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
| 금융산업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
| 금융소비자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관행 개선 |
| 자본시장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
| 자본시장조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
| 대변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
| 금융정보분석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그룹감독 정책, 건전성 감독 등 ·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

(2) 인원

□ 정원 : 314명 ('20. 4월말 현재)

| 구 분 | 정무직 | 일반직 | 특정직 | 계 |
|---------|-----|-----|-----|-----|
| 정원 합계 | 2 | 304 | 8 | 314 |
| 본부 | 2 | 243 | - | 245 |
| 금융정보분석원 | - | 61 | 8 | 69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9 | '20 | '21 | '22 | '23 |
|-------------------------------|---------|-----------------|------------------|-----------------|-----------------|
| □ 재정사업 합계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4,804 | 8,864 84.5% | 4,930 △44.4% | 3,538 △28.2% | 1,768 △50.0%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287,331 | 328,722 | 369,571 | 356,900 | 403,048 |
| □ 총지출 구분 | | | | | |
|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 248 | 281 13.3% | 300 6.8% | 321 7.0% | 344 7.2% |
|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 72 | 77 6.9% | 79 2.6% | 81 2.5% | 84 3.7% |
|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 4,484 | 8,507 89.7% | 4,551 △46.5% | 3,135 △31.1% | 1,341 △57.2% |
| □ 예산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4,788 | 8,732 82.4% | 4,770 △45.4% | 3,533 △25.9% | 1,768 △50.0%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25,788 | 29,732 15.3% | 67,770 127.9% | 70,533 4.1% | 73,768 4.6% |
| 【일반회계】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4,788 | 6,732 40.6% | 4,770 △29.1% | 3,533 △25.9% | 1,768 △50.0%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25,788 | 27,732 7.5% | 67,770 144.4% | 70,533 4.1% | 73,768 4.6%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 | | | | |
|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2,000 | -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 | 2,000 | - | - | - |
| □ 기금 | | | | | |
| ○ (총)지출 | 15 | 132 | 160 | 5 | 0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780.0% | 21.2% | △96.9% | △100.0% |
| ○ 총계 | 261,542 | 298,990 | 301,802 | 286,367 | 329,280 |
| (전년대비증가율, %) | | 14.3% | 0.9% | △5.1% | 15.0% |
| 【공적자금상환기금】 | | | | | |
| ○ (총)지출 | 15 | 132 | 160 | 5 | 0 |
| (전년대비증가율, %) | | 780.0% | 21.2% | △96.9% | △100.0% |
| ○ 총계 | 84,578 | 104,313 | 85,471 | 92,116 | 107,897 |
| (전년대비증가율, %) | | 23.3% | △18.1% | 7.8% | 17.1%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 | |
| ○ (총)지출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총계 | 708 | 680 | 701 | 645 | 555 |
| (전년대비증가율, %) | | △4.0% | 3.1% | △8.0% | △14.0% |
| 【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총계 | 77,544 | 76,427 | 87,256 | 87,200 | 84,961 |
| (전년대비증가율, %) | | △1.4% | 14.2% | △0.1% | △2.6%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총계 | 15,695 | 11,307 | 23,468 | 10,127 | 14,254 |
| (전년대비증가율, %) | | △28.0% | 107.6% | △56.8% | 40.8%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 | |
| ○ (총)지출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총계 | 56,582 | 65,760 | 55,578 | 61,454 | 72,525 |
| (전년대비증가율, %) | | 16.2% | △15.5% | 10.6% | 18.0%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 | |
| ○ (총)지출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총계 | 26,436 | 40,503 | 49,327 | 34,827 | 49,090 |
| (전년대비증가율, %) | | 53.2% | 21.8% | △29.4% | 41.0% |

* '19년은 실적, '20년은 예산, '21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을 명기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특성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①금융산업의 선진화, ②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③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④금융소비자 보호”를 4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신뢰받는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추진
 -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 전략목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선정
 - ‘20년에는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2개의 성과목표 하에 38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추진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년의 경우 12개 성과목표에 대한 14개의 성과지표와 38개 관리과제에 대한 63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선정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1. 금융산업의 선진화
 2.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 건전한 신용질서·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4. 금융소비자 보호

비전 : 신뢰받는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기 본 방 향

- ◇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 기반을 확립하고,
 -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이 혁신적 기업·주력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확대·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등은 다양한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나, 관련 동향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 달성노력 지속 필요
 - 동시에 코로나사태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필요

전략목표1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주요내용

-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기반을 확립하고,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실적 | | | | | 목표치 '24 |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5 | '16 | '17 | '18 | '19 | | | | |
|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 1,203.1조원 | 1,342.5조원 | 1,450.8조원 | 1,536.7조원 | 1,600.1조원 | 1,995.9조원 |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 한국은행(분기별 가계신용)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 |
|-----------------------------|------|------|------|------|------|
| | '18 | '19 | '20 | '21 | '22 |
| I -1.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 5.9% | 4.1% | 5.0% | 4.8% | 4.5% |
| I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 - | 15회 | 15회 | 15회 | 15회 |
| I -3.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공급 (조원) | 27.0 | 31.5 | 31.0 | -* | -* |

* 향후 계획은 예산배정, 공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정짓기 곤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가계부채는 전세자금대출, 신용판매(신용카드 사용액) 등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국내외 금융시장 역시 대외적 경제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전적 통제가 곤란한 측면
- 한편,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할 필요

<갈등관리>

- 가계부채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 및 갈등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 *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원장 주재, 금감원·금융업권 등)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가계부채 관리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국토부, 금융위 등)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는 기업의 재무개선을 넘어 산업·고용 측면 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 발생 가능
 -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대규모·기간산업의 경우 범정부 협의체(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정할 계획

(4) 기타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시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1) 주요 내용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통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관리

- 소금융권 DSR 도입 등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체계 구축으로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통해 금융권 자금공급을 가계에서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혁신적 부문으로 이동(Shift) 촉진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여 대내외 충격시 취약 계층 보호

*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의 가치로 한정하는 대출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 8.1% | 5.9% | 4.1% | 5.0% |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 한국은행(분기별 가계신용) |

|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1.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 4.1% | 5.0% | 4.8% | 4.5% | 4.3% | 4.0% |

(3) 세부 추진계획

소 금융권 DSR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함으로써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 차단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 자산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목표*를 부여('20.6월)하고, 정책 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 확대 (연중)**

* 민간은행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혜택 부여

** '19년말 누적공급액 6.0조원에서 '20년말 누적공급액 11.0조원 이상으로 확대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가계부채는 전세자금대출, 신용판매(신용카드 사용액) 등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및 갈등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원장 주재, 금감원·금융업권 등)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가계부채 관리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국토부, 금융위 등)

(5) 기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시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성과목표 I-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잠재리스크 누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강화
-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경제 내 잠재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개별기업 부실의 선제 차단·확산 방지 및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 조성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 - | - | 15회 | 15회 | 대표적인 선제적 점검조치인 (1) EWS(월1회*12개월)와 (2)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 평가(총 3회)의 목표치를 합산하여 산출 | (1)EWS모니터링 실시 횟수 + (2)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평가 횟수 | (1)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결과 취합 (2)주채권은행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평가 실시 결과 취합 |

|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 15 | 15 | 15 | 15 | 15 | 15 |

(3)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금융시장 변동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입,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 마련 등 금융산업 건전성 제도 개선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는 기업의 재무개선을 넘어 산업·고용 측면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 발생 가능
 -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대규모·기간산업의 경우 범정부 협의체(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정할 계획

성과목표 I-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이 혁신적 기업·주력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혁신부문 지원 강화) 정책금융·민간 자금 등이 혁신적인 부문에 집중 공급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주력산업 지원)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 적극 지원
- (여신시스템 개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성·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

(2) 성과지표

(단위 : 조원)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 | 21.0 | 27.0 | 31.5 | 31.0 |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20년도 업무계획 | 각 정책금융기관 금융공급 실적 집계 | 각 기관별 제출 자료 |

|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3.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 | 31.5 | 31.0 | - | - | - | - |

(3) 세부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업·정책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혁신부문·주력산업 등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혁신부문 지원 강화)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1,000 기업 집중지원, 성장지원펀드 등 혁신부문 자금공급 확대
 - (주력산업 지원) P-CBO 지원 확대 등으로 주력산업 자금애로 해소, 소부장 펀드 조성·운영 등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지원
 - (여신시스템 개선) 동산금융 확산을 위해 회수지원기구 설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금융(보증)상품 공급 등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 기업 자금애로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시장 불안·기업 유동성 애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 코로나사태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혁신부문 지원전략 등도 세밀히 구축해 나갈 필요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본방향

◇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혁신도전자 출현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각 금융업권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1) 주요내용

□ 금융산업에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스폴라이센스, 임시허가 등을 도입

○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

○ **(임시허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20.12월~)

-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이 입증되었으나,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

- **(핀테크 육성체계 강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예산·해외진출 등 쏠분야에 지원기반 대폭 확충
 -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핀테크 혁신펀드」(‘20년 825억원 →4년간 3,000억원)를 통해 자금지원
 - ※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 및 조직 강화
- **(면책제도)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실적 | | | | | 목표치 |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5 | '16 | '17 | '18 | '19 | '24 | | | |
| 금융업권 총자산 (조원) | 3,789 | 4,068 | 4,299 | 4,598 | 4,960 | 6,420 | 최근 5년간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 총자산 증가액(평균 292조원)을 고려하여 연간 292조원의 증가액을 설정('24년 6,420조원으로 목표설정) | 24년말 금융업권 총자산 실적을 측정 | 각 회사 및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 확인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실적 | | 목표치 | | |
|-----------|----------------------------|-----|-------|-------|-----|-----|
| | | '18 | '19 | '20 | '21 | '22 |
| II-1.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 - | 77 | 40 | - | - |
| II-2.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금액(억원) | - | 6,530 | 7,000 | - | - |
| II-3. | 「금융기관점사및제재규정」개정 | - | - | 개정 | - | - |
|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접수) | 80 | 90 | 100 |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금융분야 경쟁과 혁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존
 -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참가자 확대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및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 (갈등관리계획)** 경쟁도 평가 결과 등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고려하여 관리과제 추진

(1) 주요 내용

-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혁신기반 강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
 -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속 운영을 통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의 출현 지원
 -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 마련
 - (디지털금융 고도화) 디지털금융 전반의 고도화와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
| | '17 | '18 | '19 | '20 | | |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 신규 | 신규 | 77 | 40 |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목표 지정건수 설정 - 지정 개수뿐만 아니라 혁신금융 서비스의 질적 요소 고려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 보도자료 등 |

(3) 세부 추진계획

- 관련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혁신기반 강화)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개최(5월), 핀테크 혁신펀드 운용(연중), 핀테크지원센터 역량 강화(하반기) 등
 - (샌드박스) 샌드박스 제도 지속 운영(연중) 및 제도보완 수요를 반영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5월)
 - (데이터경제 활성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8월),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 허가(하반기) 등
 - (디지털금융 고도화) 디지털금융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인해 박람회, 핀테크 행사, 해외진출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거나 타국 방문이 필요한 일정은 차질이 생길 가능성
 -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형 금융산업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진입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하고 스폰라이센스 및 임시허가 등 도입 추진
 -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수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제도 개선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금액 | 1,371 억원 | - | 6,530 억원 | 7,000 억원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6,530억원을 감안하여 '20년에 7,000억원을 목표로 설정 | 각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규대출실적을 금감원을 통해 집계 | 보도자료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I-1.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금액(억원) | 6,530 | 7,000 | - | - | - | - |

(3) 세부 추진계획

-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제개정 또는 경쟁도평가 실시
 - **(진입규제 완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 보험업 진입완화 필요성 검토 위한 경쟁도 평가 실시

- **(신탁제도 개선)**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등을 통해 특화 신탁사 (지식재산권 신탁, 유연신탁 등)의 진입을 촉진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우리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 등 향후 금융시장 전망 악화, 신규 금융사의 부실화 우려로 진입규제 완화에 부정적일 가능성
- 경쟁도 평가 결과, 연구용역 등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고려하여 관리과제 추진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성 제고
-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 규정」개정 | - | - | - | 개정 |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 추진 | 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여부 |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금융위원회 공고문을 통해 확인 |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 70 | 80 | 90 | 100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의 선정과 공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020년도에는 100점을 목표로 설정 | 대상과제 선정 정도(A)+과제내역서 공개 정도(B)*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홈페이지 (www.fsc.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 |

(3) 세부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 (‘20.상반기)
 -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금융기관·협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20.하반기)

- 주요 금융정책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내 역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포털 및 홈페이지에 공개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융정책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민신청실명제('20년 4월·7월·10월) 실시
- '20년말까지 1,133개 금융규제(54.7%) 정비를 완료하고, '21년말까지 100% 정비 추진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면책대상 업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금융정책 및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인 추가지정·변경 등 필요
 - 제도개편 뿐만 아니라,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감원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

전략목표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본 방향

- ◇ 서민금융공급 확대,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 운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주요내용

-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리단층 현상을 개선하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
 -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보증보험 연계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16.7월*)하고,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마련
 - * (은행)'16.7월, (저축은행)'16.9월, (상호금융)'17.6월
 - **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많을수록 저축은행·여전·신협법상 적용되는 대출규제 준수가 용이해지도록 업권별 규정 개정
- 연체채무자 보호·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 마련 추진
 - * 미국('68년), 영국('74년), 독일('90년), 호주('09년) 등 주요국은 연체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소비자신용규율 旣마련
-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
- 금융규제의 감시·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음부즈만 제도 활성화

-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현장소통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연령의 금융니즈를 발굴하고,
- 각 업권별 ombudsman 위원이 주도하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실적 | | | | | 목표치 |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5 | '16 | '17 | '18 | '19 | | | | |
| 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조원) | - | 0.37 | 1.33 | 3.16 | 5.28 | (13.48) | '16~'19년중 중금리대출 연평균 공급액(1.64조원)을 매년 공급할 경우 '24년말 누적공급액 | 은행·저축은행·상호 금융의 사잇돌대출 실적 합산 | 서울보증보험 집계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 |
|-------------------------|-----|-----|---------------------------------|-----|-----|
| | '18 | '19 | '20 | '21 | '22 |
| Ⅲ-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 7.2 | 8.0 | 7.0 | 7.0 | 7.0 |
| Ⅲ-2.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 | - |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 - | - |
| Ⅲ-3.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 - | - | 방안마련 | - |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 가능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설계 필요

(1) 주요 내용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재정지원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금융자산 출연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재원 추가 확보
 -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보호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 촉진
 - 소비자신용법 제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조원) | 6.9 | 7.2 | 8.0 | 7.0 | '16~'19년 연평균 공급액 6.7조원 고려 및 업무계획에 '20년 중 7.0조원 공급 발표 | '20년 중 서민금융상품 공급액 |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감독원 통계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평균감면율(%) | 29 | 28 | 30 | 33 | '19.2월 발표한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감면체계 개선목표 ('22년까지 감면율 39% 달성) 감안 | 채무원금감면액 / 채무조정전 채무원금 | 신용회복위원회 통계 |

(3) 세부 추진계획

-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 및 공급 확대
 -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 공급 ('16~'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
 - 재정지원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추진
 -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편의제고 및 권리 보호 강화

□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

- 시장·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 상품 개발 촉진('20년중 방안 검토)
-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 추진('20.上)

□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 채무자 재기지원과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대부업법 전부개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안정적인 서민금융 자원 확보 및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관리절차 규율 마련 필요 등의 요구 존재

□ 상시 출연제도,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은 금융회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갈등 관리

(1)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리와 제도 도입
-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추진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효율적인 지원대상 선정·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20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 | | |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 | |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 '21.4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추어 법률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감독 규정 등 하위 규정 마련 | 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 여부 | 보도자료 (금융위 홈페이지)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국회 설명 등 쟁점해소 노력을 지속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III-3**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1) 주요 내용**

-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
-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은퇴 노령층 노후보장 방안 확충,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지원 추진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 - | - | - | 마련 | 수요자 맞춤형 정책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발표 | 보도자료 발표 여부 | 보도자료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소비자에게 수혜가 되는 반면, 금융사 부담은 적어 갈등 요인 미미
- 신용평가 역량이 미비한 신규 시장을 조성하거나(중금리), 공적재원투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사 등의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함
-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책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기본방향

- ◇ 창업·혁신부문 지원 등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및 거래량 증가*, 대형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모험자본 공급액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 * 신규상장/일거래량(개, 조원) : ('16말) 70/3.4 → ('19말) 78/4.3
 - * 대형증권사 모험자본 공급규모(조원) : (13) 0.08 → (19) 1.59
 - 그러나, 성장·혁신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제도적 제약*이 있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 * 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공백이 존재
 - ② 증권사가 기업금융업무 수행에 있어 건전성 규제 등 제약이 존재
 - ③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 인프라의 발전수준이 미흡
-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나아가 금융 산업을 선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

(1) 주요내용

-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
-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제재체계 개선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
-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실적 | | | | | 목표치 |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5 | '16 | '17 | '18 | '19 | '24 | | | |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 55.0 | 54.1 | 55.9 | 52.2 | 53.0 | 55.0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매년 전년 대비 0.5%p씩 증가를 가정(단, '20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19년 수준 유지를 가정) | (비금융법인기업의 채무증권부채 + 지분증권부채) / 비금융법인기업의 총부채 | 한국은행 보도자료(자금순환)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실적 | | 목표치 | | |
|---------------------------------|-------|-------|----------------|-------|-------|
| | '18 | '19 | '20 | '21 | '22 |
| IV-1. 금융분야 공정경제 법안 국회 상정 및 입법지원 | 법안 상정 | 법안 논의 | 법안 제상정 및 입법 지원 | - | - |
| IV-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 8.9 | 9 | 9.1 | 9.15 | 9.2 |
| IV-3. 국내 증권사 총자산 규모 | 439.0 | 482.6 | 437.2 | 452.9 | 503.3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정경제 기반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
 - 또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타날 수 있음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득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
 - 아울러 제도개선과정에서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금융그룹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등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 ①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금융계열사 참여)하여 그룹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영위 그룹)
 예) 삼성, 현대차, DB, 한화 등 금융그룹
- ②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동반부실 등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 | |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국회제출 · 모범규준 개정·연장 | 금융분야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제도화 노력을 목표로 치로 설정 |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 국회제출, 모범규준 개정·연장 여부, |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
| | | | | · 지배구조법 개정 | 성과목표 관련 법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재입법절차 추진 | 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재입법절차 진행여부* 및 시행령 마련 여부 *국회제출→상임위 소위통과 →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법사위 소위 통과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통과 | |

(3) 세부 추진계획

□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노력

- 20대 국회 만기전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

* 박선숙 의원 발의안('18.6월), 이학영 의원 발의안('18.11월)

- 21대 국회에서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금융그룹 모범규준 개정·연장

- 法 제정 이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과 이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이 필요

- 금융그룹감독은 현존하는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그룹리스크를 금융그룹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 제도 도입 여건 평가·보완 등을 위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법 개정안('18.9월 국회제출)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그룹감독) 그룹차원의 새로운 규제(예: 자본규제) 도입으로 언론, 업계, 국회로부터 중복 · 과다규제 주장* 등 비판 소지

* 개별 금융회사에 건전성 규제가 이미 적용되므로 그룹차원 규제는 중복 규제라는 주장

- ①주요 금융선진국이 이미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한 점, ②개별 금융법이 포착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점 등에 대해 의원 등을 설득하여 제도도입 여건 조성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자본 중복계상, 내부거래 편중,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체계적·일관된 정비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필요함을 강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야당과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심사요건 강화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1) 주요 내용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제재체계를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 확립
 -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도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여 금융분야의 부당행위를 철폐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 8 | 8.9 | 9 | 9.1 | 최근 3편 평균 사건처리 건수 (건) 대비 5% 상향 |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V-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 9 | 9.1 | 9.15 | 9.2 | 9.25 | 9.3 |

(3) 세부 추진계획

- 금융위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과의 전용선 연결
 - 금융위 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시스템과 전용선 및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하여 보안성 높은 연계망을 구축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시제도 개선은 기업 측의 부담, 투자정보로서의 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
-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특사경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시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견을 조정할 필요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IV-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
 - 증권사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2)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7 | '18 | '19 | '20 | | | |
|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단위 : 조원) | 390.0 | 439.0 | 482.6 | 437.2 |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 규모를 감안하되, 코로나 19에 따른 증권산업 침체를 고려하여 '19년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 | 국내 증권사 자산의 합 | 금융감독원 통계 시스템 |

| | 실적 | 목표치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 IV-3.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 | 482.6 | 437.2 | 452.9 | 503.3 | 510.9 | 538.0 |

※ '21년까지의 목표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증권산업 침체를 감안하여 직전 3개년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22년 이후는 직전 3개년 평균값의 110%로 설정

(3) 세부 추진계획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
 - 혁신기업의 발굴 및 자금공급과 관련된 신규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투자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
 - 일반국민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 마련
 -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창업에서 성장·회수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 투자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
 -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과정에서 금융투자업권, 금융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아울러,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노력을 추진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